



주간통일정세 2008-47(2008.11.17~11.2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8-47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北, 김정일 공연관람 해외보도로 대내 선전(11/2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의 공연을 관람했다는 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했다”면서 해외언론들이 북한 매체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동정을 다룬 것을 20일 보도
- **또 ‘사진 없는 김정일’ 보도(11/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오전 5시 김 위원장이 인민군 해군(海軍) 중대 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역시 관람 날짜와 장소를 밝히지 않음. 또 조선중앙 TV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32차 군무자 예술축전 공연을 관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관람 모습은 한 장도 내보내지 않은 채 공연 사진 12장만을 공개

#### 나. 정치 관련

- **北신문, 자력갱생 사회주의 고수 강조(1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정론’을 통해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라고 선전하는 ‘강계정신’의 발휘를 거듭 강조하면서 ‘강계정신’을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본태”를 지키는 “사회주의 결사투호 정신”이라고 규정
  - 노동신문은 공동필자들이 “천지개벽한 자강도의 새 모습”을 둘러본 르포형식의 이 글에서 “우리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면서도 “원수들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도, 잘 사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이 땅에서 사회주의 붉은기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봉쇄의 칼바람은 1998년과 다를 바 없으며, 우리를 압살하려는 보이지 않는 공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외부 정세에 대한 인식을 드러냄.
  - 또 ‘강계정신’이 배척하는 대상들로 “따끈한 아랫목이나 찾고 제 살림 불리는 데 재미를 붙인 사람들”, “조건 타발(여건이 열악하다는 불평불만)”, “남을 넘겨다보는 사대주대주의”, “돈에 대한 환상과 자본주의 날라리 바람”, “사리와 공명을 추구하는 걸치레와 허풍치기” 등을 들이므로써 북한 사회 내부의 사회주의 이완 현상을 드러내기도 함.



● **北, 李대통령 발언들 시비하며 예민 반응(11/2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군부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없을 경우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남북관계 발언을 일일이 시비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임.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2일 이 대통령이 최근 방미중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밝힌 데 대해 “북침전쟁을 ‘최후 목표’로 선포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제는 반공화국(반북) 대결 광증이 골수에 배길대로 배긴 이명박 패당과는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미 선포한 대로 그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통신자재 제공’ 제의에 열흘째 침묵 (11/22, 연합뉴스)**

- 군 당국이 서해지구 군 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자재·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하자는 전화통지문을 북한 군 당국에 보낸 지 22일로 열흘째를 맞지만 북측으로부터 답신은 오지 않고 있음.
- 군 관계자는 우리가 12월 13일 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자재 제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북측도 거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나와야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다고 밝힘.

● **北인권결의안 채택...남북갈등 심화(11/21, 연합뉴스)**

-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재확인, 이날 표결에 참여한 181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이 95, 반대 24, 기권 62개국으로 나타난 것은 인권결의안에 내포된 국제정치적 의미를 차치하고라도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성매매,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 심각한 북한내 인권 상황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촉구
- 지금까지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결의는 유럽연합(EU) 주도로 인권위원회에서 세 차례, 총회에서 두 차례 채택되었고, 이번 제3위원회 가결에 이어 12월 초, 총회 차원의 3번째 결의안이 채택되면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 가중 효과를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날 표결에서 앞서 북한 유엔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가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며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한 것은 향후



남북 관계가 더욱 어두워 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

-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2007년 결의에 포함됐던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이 삭제되면서 북측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측은 두 남북정상 선언에 대한 지지대목이 빠진 것이 한국정부의 요청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를 남북 관계 단절의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짐.

### ● 北김일철, 2012년 강성대국 실현해야(11/19, 연합)

-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19일 “경제건설과 주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으려는 우리 당의(김정일) 구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김 부장은 19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린 항일빨치산 류경수의 50주기 중앙추모회에서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평화의 무기”이며 “강한 정신력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
- 그는 또 “인민군대에서는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전군에 김정일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모든 간부와 주민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일심단결을 공고히 하고 장군님(김정일)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
- 이날 중앙추모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광범기·태종수 내각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 또 이날 김일철 부장과 함께 김기남 당비서, 최영림 서기장 등 고위간부들은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있는 류경수의 반신상에 헌화

### ● 김정일, 김용순 회고(1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참된 혁명가, 실력가들을 키워내는 위대한 품’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김 위원장이 김 비서가 “뜻밖의 일로 사망한 후 오늘까지도 그를 잊지 못하시며 자주 회고하신다”고 소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3년 10월 사망한 김용순 전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를 잊지 못하고 “그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몫 단단히 할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언
- 신문은 특히 이날 소개한 김 위원장의 김용순 회고 시기를 “지난 8월 어느날”이라고 밝혀 주목, 김 위원장은 8월 14일 보도를 끝으로 공개활동 보도가 장기간 끊겼으며, 한국 등의 정보기관들은 김 위원장이 8월 중순 뇌관련 질환으로 와병한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임.
- 노동신문의 이 기사는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간부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 위원장은 김용순 외에도 조평통 위원장을 지낸 허 담 전 대남비서, 연형묵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사망한 최측



- 근들에 대해 회고한 사실이 북한 언론매체들에 종종 소개된바 있음.
- 김 위원장은 2000년 5월 중국 등 해외 방문이나 국내 시찰에 빠짐없이 김용순이 수행케 했으며, 최근엔 북한의 조선혁명박물관에 있는 ‘수령님(김일성)과 전우관’에 김용순의 자료를 전시토록 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
- 김 위원장은 특히 2000년 6월 평양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자신간 2차 정상회담에 앞서 환담하는 자리에 다른 간부들을 물리치고 김용순만 유일하게 왼편에 배석시킬 정도로 그를 각별히 신임했음. 김 위원장은 2003년 6월 김용순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를 살리기 위해 “여러 나라들에서 유능한 의사들을 데려다 치료문제를 협의하게 하고 우리나라(북한)에 없는 약과 설비면 지체 없이 비행기를 띄워 날라오게” 했다고 노동신문은 소개

#### ● 北, 美국방 핵발언에, 억제력 강화(1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핵 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범죄 행위’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일정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발언과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핵무기관련 결의안에 반대한 것 등은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보여준 다며 그에 대처해 북한이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고 주장

#### 다. 경제 관련

#### ● 유럽 민·관, 금융위기속에도 北지원 계속(11/2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을 지원해 온 유럽 국가들이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정부나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은 2009년 북한에 대한 농업 기술과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580만 스위스 프랑(약 480만 달러)을 책정했다고 캐서린 젤워거 SDC 평양사무소장이 밝힘. SDC는 1997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음.
- 2001년 평양에 개발협력 사무소를 개설한 이탈리아 역시 “내년에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은 물론 여러 협력 사업을 하고 정치적, 외교적 행사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탈리아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RFA는 보도, 이탈리아 외무부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인도적인 목적으로 1천500만 유로(약 1천800만 달러)를 지원했고, 2008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130만 유로(약 160만 달러)의 지원품을 북한에 보냄.
- 한편 북한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유럽의 비정부기구(NGO)들은 내년엔 식량개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RFA는 보도



- 북한에서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던 프랑스의 ‘프리미어 어전스 (Premiere Urgence)’는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부터 평양의 룡성농장, 황해북도 연탄, 삼훈, 미곡농장, 평안북도 광산, 청원, 소주농장 등 모두 7개 농장의 토끼 사육과 사료 생산을 지원할 계획,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약 9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토끼 사육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하며 이 사업을 통해 약 1만3천명의 북한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스웨덴의 ‘PMU인터라이프’는 2009년부터 황해남도과 평안남도 지역 6개 농장에서 씨감자 배양을 지원하고 농기계 교육도 실시, 1995년부터 북한에서 활동했던 PMU인터라이프는 2005년 말 북한 당국이 국제 비정부기구들을 모두 추방함에 따라 대북 사업을 중단했다가 2007년 북한 당국과 합의해 식량 개발사업을 재개했으며 주로 온실, 우유 가공시설, 농자재 지원, 감자 저장고 등의 사업을 벌여왔음.
  - 독일의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도 2009년엔 씨 옥수수를 배양하는 사업을 북한에서 진행, 이 단체 대북 담당자는 “평안북도 지역 농장에 품종이 우수한 씨 옥수수 재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부터 평안북도 운산에서 진행해 온 옥수수 씨를 생산하는 설비 설치도 내년 6월 경이면 완공된다”고 말했다고 RFA는 보도
  - 북한에서 간척지 개발 사업을 펼치는 프랑스의 국제인권단체인 ‘인도주의 삼각세대(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도 내년 상반기에 평안남도 온천군의 금성 간척지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식량 개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
- **쿠웨이트, 北에 2천만달러 차관 제공(11/20, 미국의소리방송; 11/18, 조선중앙통신)**
- 쿠웨이트 정부가 설립한 ‘쿠웨이트 아랍 경제개발기금(쿠웨이트 기금)’이 북한에 2천17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0일 보도
  - 쿠웨이트기금은 이 기금의 방북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한 1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차관은 평양시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쓰일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평양의 하수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과 공중보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방송은 쿠웨이트기금 대북 차관의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음.
  - 쿠웨이트기금은 쿠웨이트가 2001년 북한과 수교한 2002년 3월 평양시 상수도 재건 사업에 2천170만 달러의 차관(이자율 연 2%, 상환기간 24년)을 제공한 데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같은 액수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 북한은 쿠웨이트기금의 차관으로 2003년 8월 평양시 상수도 재건 공사를 시작했으며, 2007년 2월 평양에서 쿠웨이트기금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 공사 준공식을 갖기도 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쿠웨이트기금 대표단의 방북 사실을 전하면서 도 차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19일 기금대표단이 북한 도시 경영성과 상호 협조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이것이 차관 제공과 관련된 합의서로 추정
- \* 쿠웨이트기금은 1961년 쿠웨이트 정부가 아랍국가들에 대한 개발 용자와 기술 원조를 목적으로 설립했으나 1974년 모든 개발도상국으로 용자 대상을 확대했으며 주로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집중

#### ● **美 5차분 지원 식량 北 도착(11/20,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기로 한 식량 50만가운데 5차분이 18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
- VOA는 이번에 전달된 밀과 옥수수 2만5천60t은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노약자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배분될 것이라고 보도, 이로써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실제 제공된 식량은 총 14만3천330t에 달함.
- 현재 6차분 2만5천t을 선적하고 있는 미국의 식량선박은 12월 중순 출항해 2009년 1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

#### ● **국제기구, 북한산 의약품으로 北지원(11/18,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을 구매해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의료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스위스 투자회사와 북한 평양제약공장이 공동 투자해 2004년 평양에 설립한 '평스제약합영회사'의 펠릭스 앵트 회장은 이들 국제기구 뿐 아니라 해외의 지원단체중에서도 북한산 의약품을 구매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앵트 회장은 "국제기구가 사들인 북한산 의약품은 다시 대북 의료지원에 쓰이거나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특히 북한산 의약품은 WHO의 국제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에 맞게 생산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신뢰를 갖고 구입한다"고 언급하고 북한산 의약품을 구매해 다시 북한을 지원할 경우 해외에서 구입할 때보다 운송비, 저장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

#### ● **北, 3년간 200개 고려약공장 개보수(11/17, 조선신보)**

- 북한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 계획으로 고려약(한약)공장 개선 사업을 벌여 200여 공장들을 개보수했다고 조선신보가 17일 보도, 조선신보는 북한의 조용덕(57)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 기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여러 단위들에서 고려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비들을 새로 제작하여 생산에 도입하였다"고 설명



● **北, 다수확 품종 보급 확대 주력(11/17, 조선신보)**

- 북한 농업성이 11월 12~13일 평양에서 ‘전국농업부문기술경험발표회’를 열고 다양한 다수확 품종의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각 도, 시, 군의 농업지도기관, 협동농장, 농업과학원을 비롯한 연구소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표회는 농산, 종자, 공예작물(공업원료용 작물), 관개수리부문에 나뉘어 진행됐으며 2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됨.

라. 사회·문화 관련

● **北영화인, 김정일 지시로 합숙훈련(11/23, 뉴욕타임즈)**

- 북한의 공훈예술가인 장인화 감독은 지난 9월 열린 제11회 평양국제영화축전(17~26일)에서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기자와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영화에 얽힌 김 위원장과의 일화를 언급
- 장 감독은 몇 년 전 김 위원장의 명령으로 수십명의 영화감독과 시나리오작가, 촬영감독들이 호텔에 마련된 ‘영화훈련소’에 모여 6개월간 200여편의 영화를 봤다고 언급, 이들이 관람한 영화들 가운데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신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브레이브 하트’, ‘트로이’ 등 ‘미제 영화’도 있었으며 합숙소에서 이들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본 뒤 영화제작 기술 등에 대한 각자의 소견을 담은 편지를 김 위원장에게 올렸다고 함.
- 김 위원장이 합숙소를 직접 찾지는 않았지만 장 감독은 “우리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와 시나리오 구성과 연기, 편집 면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며 “기름 새벽 시간에도 전화를 걸어오시기도 했다”고 전언
- 신문은 김 위원장이 할리우드 영화광으로도 알려져 있다면서 평양에 250명의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는 3층 높이의 빌딩에 2만편에 이르는 세계 각국의 영화 필름을 소장하고 있다고 보도

● **北, 이혼하면 벌금·강제노역(11/22, 조선일보)**

- 북한당국은 부부가 이혼하면 벌금 50만원(한 달 근로자 평균 월급 3,000원)을 내도록 하는 새 규정을 선포하고 최근 전국에서 시행에 들어감. 벌금 낼 돈이 없는데 꼭 이혼하겠다는 강제노역 6개월로 대치
-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혼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러한 엉뚱한 규정을 내놓은 배경에는 전통적인 결혼문화가 무너지면서 사회가 무질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함.
- 올 9월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강연회를 통해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미신행위





나 매춘행위, 딸과 같은 나이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성들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고 함.

● **北, U-17 여자월드컵 제패 대표팀 대대적 환영(11/2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평양시민들이 21일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축구월드컵 경기를 제패한 북한 여자축구팀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방송은 평양 공항에 ‘세계청소년 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하고 돌아오는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구호판이 세워져 있었으며 평양시민들과 체육인들은 축구팀을 태운 비행기가 도착하자 꽃다발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다”고 보도, 공항에는 김중린 노동당 비서, 광범기 내각 부총리, 박학순 체육지도위원장, 북한축구협회 위원장인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리용철 청년동맹 1비서, 박병중 평양시 인민위원회 1부위원장, 리중무 북한군 중장 등이 나가 축구팀을 영접

● **北, 김일성생가 거리 녹화사업 추진(1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거리를 녹화사업 시범단위로 지정, 김 주석의 100회 생일(4.15)이 되는 2012년 4월까지 녹화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통신은 북한 내각의 도시경영성, 평양시, 만경대구역이 이 사업의 계획을 짰다며 “광복거리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총설계가 이미 작성됐으며 올해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부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고 소개

● **北국립교향악단, 2009년 3월 뉴욕 공연(11/2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지난 2월 뉴욕 필하모닉교향악단의 평양 연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르면 2009년 3월 뉴욕에서 공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뉴욕필의 평양 공연을 측면 지원했던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11월 초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뉴욕 공연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함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RFA에 밝힘.
-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프레드 캐리어 부회장은 뉴욕필의 평양 공연 “1주년을 기념하는 날(2.26)에 (조선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했으면 좋겠지만 연말 연시로 준비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 2월 26일 이후에나 열릴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빠르면 3월 공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언급



● **북한의 '3부자 미술사'(2008년 11월호, 조선)**

- 북한의 월간 화보 조선 11월호는 '요술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들 3부자 미술사를 소개, 북한 미술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노력영웅 겸 인민배우 김택성(75)씨와 그의 두 아들 철, 광철씨가 바로 주인공, 자강도 강계 출생인 그는 지난 1969년 평양교예단 요술배우가 된 이래 30여년간 체코의 카를로비바리 미술경연, 오스트리아 빈 국제미술경연 등에 참가해 호평받았고, 특히 카를로비바리 미술경연에서 3차례(10회, 14회, 16회)나 최고상을 받는 등 국제 미술계에서 명성을 날렸으며 조선요술협회장인 김택성씨는 무대 활동은 하지 않고, 서커스와 미술 전문학교인 평양교예학원에서 자신의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요술강사로 활동, 두 아들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민배우' 칭호를 받음.

\* 북한은 미술을 '요술'이라고 부르며, 2001년 10월 '조선요술협회'가 설립

● **北, 겨울나기 준비 분주(11/16, 평양방송; 11/13, 조선중앙통신; 11/11, 조선신보)**

- 북한의 각 가정과 산업시설, 학교 등에서 혹한기를 앞두고 월동 준비가 한창으로 북한은 10~11월을 '겨울나기(월동)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요즘 조선의 모든 가정들에서 전통적인 겨울용 김치 담그기가 한창"이라며 "김장철에 여인들이 빙 둘러앉아 배추를 다듬어 씻고 절이며 양념 소를 넣는 모습은 오직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한 가을 풍경의 하나"라고 분위기를 보도, 북한은 올해 장마나 가뭄 피해를 겪지 않아 김장용 채소인 무, 배추 등의 작황이 비교적 풍작인 것으로 알려짐.

- 평양방송은 16일 "나라의 대동력 기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어야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산악같이 일떠선 각지 탄광의 일꾼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을 부쩍 늘리고 있다"며 순천, 득장, 구장, 온성지구 등 주요 탄광연합기업소의 증산 노력을 소개, 겨울철에는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석탄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석탄공급이 필수

● **北, 새해 달력 발행(11/18, 조선신보)**

- 조선화보사가 새해 달력을 발행했다고 조선신보가 18일 보도, 새 달력의 표지엔 백두산의 가을 풍경을 바탕으로 '위대한 수령...함께 계신다'는 구호와 그 밑에 '새해를 축하합니다 주체 98(2009)'라는 문구가 적혀 있음.

- 달력 1월은 '을밀대의 설경'을, 2월은 '2월의 백두산 천지' 풍경을 담았으며, 모란봉과 구월산, 금강산의 자연 풍경, 대동강변 도시 풍경,



묘향산 보현사의 만세루와 4각9층탑 등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해 달력은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도 출판됐다고 신문은 보도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 북핵 6자회담 내달초 개최 합의(11/22, 백악관)

-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을 내달 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22일 발표
-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신고 내역 및 영변 핵시설 불능화 검증문제 합의를 위해 12월 초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한 것으로 백악관이 발표
- 페리노 대변인은 “(한·미·일 3국 정상간에)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다른 모든 참가국들의 일정을 확인한 뒤 중국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서 얼마 뒤 다시 “6자회담 개최시기는 내달초가 될 것”이라고 언급
- 부시 대통령은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신고내역 및 핵시설 불능화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기를 기대, 그러나 북한도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나. 북·중 관계

#### ● 中문화부장, 중국은 북한의 진정한 벗(11/22, 조선중앙통신)

- 차이우(蔡武) 중국 문화부장은 북한과 중국간 ‘경제문화협조협정’ 체결 55주년을 맞아 “중국은 조선(북한)의 진정한 벗으로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공동으로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차이 부장은 지난 9월 북한의 정권 수립 60주년(9.9)을 경축하기 위해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으며 연회에는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 등이 참석

#### ● 北-中 변경무역, 찬바람(11/18, 대공보; 연합)

- 북중 양국의 접경도시를 통해 주로 이뤄지는 변경무역이 올해 들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홍콩에서 발행되는 대공보(大公報)는 18일자 신문에 민간 변경무역의 쇠퇴로 활기를 잃은 단둥(丹東), 투



면(圖們), 훈춘(琿春), 창바이(長白), 싼허(三合) 등 접경도시의 침체된 분위기를 상세하게 보도

- 단동의 한 무역업자는 “조선(북한)에서 광산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도 수입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광산물 중계무역으로 인한 돈벌이도 시원치 않은 형편”이라고 불만을 표출, 작년까지만 해도 단동시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북한 무역일꾼들도 감소
- 룡징(龍井)의 한 무역운수업자는 “올해 들어 일거리가 아주 사라져 버렸다”며 “조선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도 없고 조선에서 물건을 사가려는 사람도 없다”며 하소연
- 무역업자들이 “변경무역이 크게 감소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통계상 북중 양국의 전반적인 교역규모는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는 16억7천4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무려 33.8% 증가한 것으로 집계, 대공보는 훈춘세관의 자료를 근거로 올해 변경무역의 감소원인으로 일반무역이 북중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변경소액무역을 대체하고 있는 현상을 꼽음.
- 이와 관련, 단동의 한 대북무역업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작년 10월부터 무역회사에 대한 검열에 착수, 우후죽순처럼 난립했던 무역회사를 정리한 데 이어 시장 단속까지 강화하면서 재력을 갖춘 일부 북한 주민이나 화교의 보따리무역이 크게 위축된 것이 변경무역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다. 북·러 관계

##### ● 방러 최태복, 모스크바시장 면담(11/22,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를 방문중인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19일 유리 루쉬코프 모스크바시장과 발레리 야제프 국가회의(하원) 부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 러 상원의장, 北초청으로 공식 방북(11/21, 러시아의소리방송)

-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의장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공식 방북한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러 연방의회 공보실의 발표를 인용해 21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미로노프 의장과 최 의장은 11월 19일 모스크바에서 회담하고 양국 의회 대표단간 정기교류에 합의했으며, 미로노프 의장의 방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라. 북·일 관계

- **北, 일제의 조선인 납치부터 선결 해결 주장(11/19,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9일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일본이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를 이유로 독자적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이나 추가 경제제재를 거론하는 것은 “심히 모순되는 행동”이라면서 일제에 의한 조선인 강제연행 및 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마. 기타외교 관계

- **북, 인도대사에 립희성 임명(11/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인도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립희성이 임명됐다”고 전했으나 립 신임대사의 구체적인 경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립 신임 대사는 2001년부터 2003년 말까지 파키스탄 대사를 역임, 북한과 인도는 1973년 12월 수교

### 3. 대남정세

- **北, 개성공단 토공 간부급 추방할 것(11/23, 남북경협시민연대)**
  - 남북경협시민연대는 23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한국토지공사 간부급 상근자를 1차적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시민연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12월부터 출입경 통제를 강화하고 1차 추방대상자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토지공사 임원 상근자를 추방할 것”이라고 주장
  -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토공은 3~4명, 45명이 상주하고 있는 관리위원회는 9~10명 정도가 각각 추방대상이 될 것으로 이 단체는 전망
  - 이 단체 김규철 대표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북측은 관리위원회와 토지공사 상근자를 준공무원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광객 충격사망사건 이후 금강산 지역에서 한국관광공사와 면회소 관련 인원들을 추방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주장, 그는 특히 토공과 관련해 “이달 초 군부대표단이 개성공단을 점검하면서 토지공사 사무실을 방문해 개성공단 2단계 공사를 안하니까 토공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언
- **10월 남북교역 작년 대비 23% 감소(11/23, 통일부)**
  - 10월 남북간 교역액이 작년 동기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
  - 23일 통일부 홈페이지의 남북 교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교역액은 1억6천306만5천달러를 기록, 작년 10월 2억1천237만8천달러에



비해 23.2% 감소했으며, 이는 전월인 올해 9월의 1억6천782만1천달러에 비해서도 2.8% 감소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10월 남북간 상업적 거래량(전체 교역의 약 97%)은 1억5천808만7천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7% 감소했으며 대북지원 중심의 비상업적 거래는 497만8천달러로 작년 대비 84.1% 줄어듦.
-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교역액 감소 배경에 대해 “환율 상승 등 최근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정부, 6·15청년학생본부 2명 방북 불허(11/22, 통일부)**

- 정부는 22일 방북 예정이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표단 5명 중 2명의 방북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21일 발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6·15 남측위 청년학생본부 대표단 5명의 방북 신청 건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명은 승인을 했고 2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판단에 따라 불허했다”면서 “그 후 단체측은 방북 계획 자체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알려왔다”고 언급

● **동해 표류 北주민 6명 구조, 송환 예정(11/20, 통일부)**

- 통일부는 20일 “18일 오후 10시10분께 강원도 고성군 제진 북동방 10마일 해상에서 표류중이던 북한선박(동력목선, 15t)과 승선인 6명을 구조, 관계기관에서 보호중”이라고 발표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신문 결과, 이들에게 대공용의점이 없고 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돼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인계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발표,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해사 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북측과 송환을 협의한데 이어 21일 오전 추가 협의를 거쳐 송환기로 함.
- 정부는 기존에 남북간 선박 구조 및 송환 등을 협의하는 데 이용됐던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의 최근 단절됨에 따라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협의를 진행

● **민노당, 北, 북미관계 열쇠는 북한이 갖고 있다(11/20, 민노당)**

- 민주노동당 방북단이 만난 북측 관계자들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북미관계의 열쇠는 북한이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0일 민노당이 전언
- 강 대표 등은 대북 전단지(빠라) 살포 문제와 관련해 “북측 핵심 관계자가 ‘북한의 강경조치는 강화될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를 막아내는 것을 보면 빠라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이 관계자는 빠라 살포 중단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언급



- 또 “조선사회민주당 김영대 중앙위원장이 ‘남측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를 가진 것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보면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언
- 이어 “평양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이행 등을 강조하려 했지만 북측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사안별로 풀수 없고 남측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해야 일괄적으로 풀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언급

● 통일부, 남북기금 지원기준 투명성 강화(11/18, 통일부)

-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18일 발표,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간 지원기금 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범위를 대북지원 승인 금액의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하도록 ‘남북 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이 강화
- 또 정책지원은 예외이지만 기금의 지원은 1개 단체에 대해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문화함. 이와 함께 기금을 지원받은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는 반드시 기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북핵 6자회담 내달 8일 중국서 개최(11/24)

- 북한의 비핵화 관련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6자회담이 내달 8일 중국에서 개최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리마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개최시기를 공개하고,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은 APEC 정상회의 기간인 22일 별도의 3자 정상회담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핵검증 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내달 초 6자회담을 개최기로 합의한 바 있음. 조지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북핵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짓기 위해 북미간에 이미 합의된 검증체계에 관한 6자회담 당사국의 추인을 받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정권이양기에 들어선 만큼 버락 오바마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높이는 시간끌기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여 현 단계에서 회담의 성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태.
- 북한은 이미 지난 1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현안인 북핵 검증과 관련, “검증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면서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음.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부시 행정부와 마지막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일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북핵 6자회담 내달 초 개최 합의” <백악관>(11/23)

-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을 내달 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22일 밝혔다. 데이비드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신고 내역 및 영변 핵시설 불능화 검증문제 합의를 위해 내달 초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한 것으로 백악관이 전했다.
- 페리노 대변인은 또 3국 정상이 내달 초 어느 날을 6자회담 개최 날짜로 합의했지만 6자회담 개최국인 중국이 이를 발표토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페리노 대변인은 “(한·미·일 3국 정상간에)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다른 모든 참가국들의 일정을 확인한 뒤 중국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서 얼마 뒤 다시 “6자회담 개최시기는 내달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부시-후진타오, “북핵 검증안 공식화 중요”(11/22)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1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논의된 북핵 검증안을 문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한 두 정상은 이날 양자회담에서 북핵 검증안의 공식화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테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이 다음달 초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 회의를 열어 북핵 검증안 공식화 문제를 매듭짓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부시 대통령과 후 주석은 또 이날 회담에서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몇년째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을 위해 올해 안으로 양국간 포괄적인 의견 조정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 두 정상은 이외에도 이란 핵 문제, 미얀마 군사정부의 인권운동가 구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해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페리노 대변인은 전했다.

#### ● 성김 북핵특사 韓·日방문 북핵검증 논의(11/22)

- 성 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24일부터 28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핵검증과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무부가 21일 밝혔다.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특사는 24~2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국과 유엔 아시아·태평양평화군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에 참석해 한국관리들과 만나고 일본관리들과의 협의를 위해 27일 도쿄(東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들은 6자회담 진전과 북핵 검증 문제, 앞으로 개최할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코맥 대변인은 또 “군축·비확산회의에는 북한 관리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특사는 이번 출장기간에 북한 관리들을 만나거나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 스티븐스 “美, 북핵 9.19성명 이행의지 불변”(11/20)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2005년 채택된 북핵 9.19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2005년 채택된 북핵 9.19공동성명을 완전히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재향군인회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방향’이란 주제의 초청강연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 같이 말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2005년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방법에 대해 한국과 모든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의향을 표시한 것과 관련,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현 정부나 차기 정부 모두 이런 메시지를 평양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 내에서 곧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몇 달 동안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바마 당선인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한국인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한미군사동맹 재조정에 대해 스티븐스 대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점차 변화하는 자연스런 발전과정으로 보며, 2012년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와 시설 60여 개가 한국 정부에 반환되는데 지금까지 35개 기지와 시설이 넘겨졌다”며 “부산의 캠프 하얏리아 등 9개 기지가 곧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북핵 도움된다면 北-美 정상회담 좋은 일”(11/17)

-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 핵을 포기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 대통령(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숙소인 워싱턴 D.C.의 윌러드 호텔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관계가 완벽하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 이 대통령은 “혹자는 미국이 직접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한국이



소외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한미관계가 과거와 같은 현상에 있을 때나 그렇지 대한민국 정권이 바뀐 뒤에는 (한미간) 철저한 공조가 됐다”며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폐쇄적 생각을 갖고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당선인의 대선 승리후 이뤄진 전화통화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오바마 당선인은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든 어떻게 한국과 철저히 협의하겠다는 생각이 중심에 있다”며 “오바마 당선인 본인이 먼저 북핵 해결에 있어서 한미간에 철저히 공조하고 협의하겠다고 분명히 전제했다”고 덧붙였다.

#### 나. 미·북 관계

##### ● “美재단, 한국단체 전단지원 요청 거부”<RFA, VOA>(11/22)

- 전 세계 민주화운동 단체를 지원하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이 한국 단체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위한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 전했다.
- 이 방송에 따르면 NED 관계자는 “실제 뼈라를 읽거나 보유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ED는 지난해 대북 라디오방송을 포함한 국내 대북 인권단체들에 120만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일부 국내 대북 인권단체가 지난달 중순 미 국무부와 NED 등에 단체활동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뼈라 문제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한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가 전했다.
- 그러나 현재 가장 활발하게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남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2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NED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RFA는 한편 해외 비정부기구들 사이에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해야 하는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국경없는인권’의 윌리 포터 대표는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활동가들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주는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미국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3.18 파트너스’의 스티브 김 대표도 “대북 뼈라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사정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뼈라 살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 “오바마, 적절한 환경돼야 북·미 정상회담”(11/2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언급했지만 북핵 문제 진전 등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돼야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당선인 측근인사가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또 대북정책에 있어 큰 틀에서 현재 조지 부시 2기 행정부의 정책노선을 유지하는 등 갑작스런 변화를 추구하지는 없을 것이라고 이 인사는 전망했다.
- 미국을 방문중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대표단(단장 박 진 위원장)은 이날 저녁 워싱턴 특파원들과 의 간담회에서 방미 활동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오바마 당선인의 측근인사는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오바마 당선인은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갈 것이며 갑자기 (김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문화진 의원이 밝혔다.
- 대북정책과 관련, 오바마 당선인은 부시 행정부 1기 때의 대북정책과는 다르지만 부시 행정부 2기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부인하는 ‘ABB(Anything But Bush)선언’은 없다고 오바마 주변인사들이 밝혔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 박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이번에 만난 인사들은)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FTA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선거기간에 피력했고,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미 의회가 FTA를 비준 동의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오바마 정부가 새 진용을 갖추면 한미 FTA 비준을 본격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고 전했다.
- 박 위원장은 “한·미 FTA는 반드시 비준돼야 하며 한·미 의회가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FTA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양국 의회 간 정책협의를 열 것을 제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오바마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한 상원의원은 오바마 정부가 한국 정부를 제쳐놓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싱크탱크 관계자는 일부에선 미국에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이명박 정부와 어려운 관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 대화하고 한국은 배제한다는 의미)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 “北국립교향악단, 내년 3월 뉴욕 공연”<RFA>(11/21)

-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지난 2월 뉴욕 필하모닉교향악단의 평양 연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르면 내년 3월 뉴욕에서 공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뉴욕필의 평양 공연을 축면 지원했던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이달초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조선국립교향



악단의 뉴욕 공연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함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RFA에 밝혔다.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은 당초 영국인 성악가 수잔나 클라크에 의해 지난 9월 영국 공연과 함께 서울과 뉴욕 공연도 추진됐으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에 영국 은행이 후원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무산됐었음.
-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프레드 캐리어 부회장은 “최근 미국 금융시장이 위기를 맞기 전에도 조선국립교향악단을 초청하는 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자금을 마련하는 문제가 전보다 더 어렵겠지만 다시 (뉴욕)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뉴욕필의 평양 공연 “1주년을 기념하는 날(2.26)에 (조선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했으면 좋겠지만 연말 연시로 준비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 2월 26일 이후에나 열릴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빠르면 3월 공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정책제안서 “오바마, 100일내 北에 특사파견해야”(11/21)

- 버락 오바마 차기 미 행정부는 정권 출범 100일안에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북미 양자간 직접대화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고 미국진보센터(CAP)가 제안했음.
- 대선과정에 오바마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CAP는 최근 발간한 ‘미국을 위한 변화: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이라는 657페이지 분량의 정책제안서 가운데 ‘미국 외교력의 재건 및 재정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음.
- 보고서는 “새 정부가 북한에 북한당국에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발전과 개선이 새로운 미국 정부의 어젠다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새 정부의 핵심적인 목표가 핵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는 또 “북한은 북미 양 당국간 고위급 직접대화야말로 미국의 새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특사는 평양을 방문하기 전후에 서울을 들러 협의하고 브리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의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북한, 파키스탄,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란도 이에 근접하는 등 핵공격의 위협이 증가했다”면서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하면 첫 해에 핵확산방지체제를 강화하고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제안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美 5차분 지원 식량 北 도착”<VOA>(11/20)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가운데 5차분이 18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



VOA는 이번에 전달된 밀과 옥수수 2만5천60t은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노약자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배분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로써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실제 제공된 식량은 총 14만3천330t에 달함. 현재 6차분 2만5천t을 선적하고 있는 미국의 식량선박은 내달 중순 출항해 내년 1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

#### ● “북미민간교류협회 관계자들 내년 2월 방미” <RFA>(11/19)

- 북한 당국자 수명이 미국 민간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내년 2월께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이 방송은 ‘미국과 북한간 식량 지원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조미(북미)민간교류협회(KAPES)’ 소속인 이들 북한 당국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식량 50만t중 10만t의 분배를 책임진 머시코, 월드비전,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사마리탄즈 퍼스, ‘조선의 기독교 친구들’ 등 구호단체들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 이들 북한 당국 관계자들은 초청 단체들의 본부가 있는 서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와 워싱턴주의 페더럴, 남부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분과 블랙 마운틴, 뉴욕 등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 소식통은 이들의 방미 목적에 대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기한인 내년 6월 이후에도 미국이 식량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 “국제기구, 북한산 의약품으로 北지원” <RFA>(11/18)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을 구매해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의료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투자회사와 북한 평양 제약공장이 공동 투자해 2004년 평양에 설립한 ‘평스제약합영회사’의 펠릭스 앵트 회장은 이들 국제기구 뿐 아니라 해외의 지원단체중에서도 북한산 의약품을 구매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했다.
- 앵트 회장은 “국제기구가 사들인 북한산 의약품은 다시 대북 의료지원에 쓰이거나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특히 북한산 의약품은 WHO의 국제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에 맞게 생산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신뢰를 갖고 구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산 의약품을 구매해 다시 북한을 지원할 경우 해외에서 구입할 때보다 운송비, 저장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 평스제약은 지난해부터 ‘평스 스피린’, ‘평스 씨타몰’ 등 해열진통제와 ‘메트로니다졸알약’과 같은 항생제, 비타민C 등을 주로 생산했지만 최근에는 기생충약과 고혈압약 등으로 제품 종류를 늘려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앵트 회장은 말했다.

- 한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은 이달 소식지를 통해 “북한 북동부지역 주민의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하다”며 최근 20만명의 산모와 영아들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가운데 8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솔티 “전단살포 금지는 김정일 달래기”(11/18)**

- 올해 서울평화상 수상자인 수전 솔티 미국 디펜스포럼 회장은 17일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달래서 향후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려놓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 솔티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한국의 통일부는 자신들이 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 속으로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이 전단살포 등을 이유로 남북관계를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서는 “김정일이 권력을 유지하고 개혁압력을 피하는 방법은 외부의 정보를 차단해 주민들을 사실상 암흑 속에 살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김정일이 풍선을 이용한 전단살포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 **美, 대북지원 식량 6차분 선적중<RFA>(11/18)**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t 중 6차분인 2만5천t을 선적하고 있어 이 식량 배가 내달 중순 출항해 내년 1월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인 ‘머시코’의 조이 포텔라 공보국장은 17일 (워싱턴 현지시간) RFA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5차분 2만5천 60t의 옥수수과 콩을 싣고 북한으로 가고 있는 ‘메리 앤 허드슨’호가 이번 주 북한 남포항에 도착하면 미국 구호단체들이 전량을 자강도와 평안북도 지역 노약자와 임산부 등 89만4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미 정상회담 북핵폐기 막판에나 가능”<美전문가>(11/18)**

-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중시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폐기 막판에나 가능하다고 내다봤음. 한반도 전문가인 에드워드 베이커 미 하버드대 엔칭연구소 전 부소장은 18일 고려대에서 열린 글로벌리더십센터 초청강연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 뒤 빨리 평양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일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베이커 전 부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것을 흥미롭게 지켜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정책에 관한 한 대화를 중시한 부시 행정부 최근 2년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위기 등 국내문제 해결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함께 초청강사로 나선 브루스 클링그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위원도 “미국의 대통령이 협상가가 될 수는 없다”면서 “북·미 정상 회담은 성과가 보장되는 북핵폐기 막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클링그너 위원은 또 “북핵문제는 한·미 간에 다투야 할 이슈 중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국간의 긴밀한 조율을 주문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밀려 진전을 위한 조건을 계속 낮춰왔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을 견지하는 북핵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 중·북 관계

##### ● “北, 내달 외국인관광객 입국제한 확인”<中언론>(11/19)

- 북한이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는 한국 등 외국 언론 매체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의 자매지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가 보도.
- 신문은 “본보 기자가 관광객 신분으로 선양(瀋陽)의 북한관광기구 대표처에 문의한 결과 대표처 관계자로부터 ‘오는 12월 15일 이후 조선으로 관광은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연말과 연초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접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올해 북한 관광은 열차를 타고 들어가는 육로 방북은 10월 중순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북한 당국은 현재 선양(瀋陽)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받아들이고 있음. 하지만 관광 목적이 아닌 외국인 등의 방북은 12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허용될 것으로 전망됨.

##### ● 北-中 변경무역에 찬바람 ‘썩썩’(11/19)

- 북중 양국의 접경도시를 통해 주로 이뤄지는 변경무역이 올해 들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대공보(大公報)는 18일자 신문에 민간 변경무역의 쇠퇴로 활기를 잃은 단둥(丹東), 투먼(圖們), 훈춘(琿春), 창바이(長白), 삼허(三合) 등 접경도시의 침체된 분위기를 상세하게 전했다.
-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조선(북한)에서 광산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도 수입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광산물 중계무역으로 인한 돈벌이도 시원치 않은 형편”이라고 불만을 표출했음. 작년까지만 해도 단둥시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북한 무역일꾼들도 감소했음.

- 이전까지 단둥에는 북한 무역회사에서 파견한 상주인원만 200여명에 달했고 이보다 많은 숫자가 무역을 위해 단둥을 드나들었지만 지금은 무역일꾼들의 왕래가 줄어들어 북중 변경무역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 자매지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가 17일 전했다.
-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국의 교역규모는 16억7천4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무려 33.8%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음.

#### 라. 일·북 관계

##### ● 日 자민당, 대북 경제제재 추가 강화안 마련(11/21)

-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납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 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는 데 대응해 대북 수출 및 입국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14개항의 추가 경제제재안을 마련했음.
- 위원회는 당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이미 유사한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도 정책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 추가 제재안은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과 관계가 있는 모든 단체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금융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자민당 특별위원회는 북한에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피해자 조기 귀국 및 진상규명 등 납치문제 해결의 기본 방침을 담은 조문을 새롭게 포함하는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음.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6월 제정됐음.

#### 마. 러·북 관계

##### ● “김정일, 러-北 관계 지대한 관심”(11/20)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증진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뜻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20일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보도.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19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의장과 만나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북한 관계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수교 60주년(10월 12일)을 맞아 이뤄진 러시아 민속공연단의 평양 공연에도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라고 밝혔음.
- 최 의장은 “북한은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에 큰 관심이 있



고 양국 협력은 새롭고,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 지도자들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세계 상황이 변하더라도 동반자 협력 관계가 지속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미로노프 의장의 북한 방문과 양국 의회 대표단의 정기적 상호 교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로노프 의장은 북측의 초청에 응하면서 자신의 북한 방문 기간에 교류협정을 맺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바. 기타

##### ● 北-이란 미사일거래 저지 긴박했던 순간(11/23)

- 북한이 지난달 중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되기 불과 수주전에 이란에 미사일 유도 장치의 핵심 부품(‘자이로스콕프’ 포함)을 수출하려다 미국과 인도 당국의 저지로 무산된 사실을 미 정부 관계자가 공식 확인했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했다.
- 22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4일 국영 항공사가 관리하는 러시아제 일류신 항공기가 미얀마에서 인도 영공을 거쳐 이란 테헤란으로 비행할 수 있는 영공 허가권을 인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음. 영공 통과를 승인한 지 사흘 뒤인 7일 인도 총리실은 ‘다급하게’ 항공 당국자에게 영공 통과 승인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음.
-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당국 관계자 두 명은 “부시 행정부가 인도 정부에 (북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공식 해제함과 동시에 북한은 북핵 관련 시설의 불능화 조치에 합의했었음.
-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핵 관련 시설의 불능화 등 일련의 과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으로 야기된 내부 체제의 혼란 때문에 상당 기간 지연돼 있던 상태였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올해 66살인 김 위원장이 지난 8월 발작 증세를 보인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미 정부는 또 김 위원장이 퇴진할 경우 매제인 장성택을 비롯한 일가를 포함, 군부와 관료, 노동당 관리들로 구성되는 집단 지도체제가 구성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 ● 北주재 초대 브라질 대사에 카힐료 전 駐泰 대사(11/22)

- 브라질 정부가 북한 대사관 개설을 앞두고 초대 대사를 지명했다고 BBC 방송이 2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올해 71세의 아르날도 카힐료 전 태국 대사를 북한 주재 초대 대사로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음. 카힐료 전 대사는 호주와 중동지역 등에서도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음.
- 브라질 외무부 관계자는 북한 주재 대사관 설치 방침이 최근 수년간



- 양국 간 정치적 관계 강화와 북한의 경제개방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브라질 정부는 북한 정치체제의 유연화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한국 및 일본 등과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북한은 그동안 양국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브라질 정부에 대해 대사관 개설을 강력하게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2001년 3월 수교 이후 2004년 9월부터 상주 대사관 개설을 추진해 왔으며 브라질 정부가 대사 파견을 위한 아그레망을 승인한 뒤인 2005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박혁을 브라질 대사로 임명하고 대사관을 공식 개설했다. 박혁 대사는 2005년 11월 말 룰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지금까지 브라질리아에서 근무하고 있음.
  - 작년 기준으로 브라질의 대(對) 북한 수출은 1억2천200만달러에 머물렀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1억6천900만달러를 기록, 다소 늘었음. 브라질에 대한 북한의 수출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음.

#### ●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11/22)

-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됐다.
-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우리나라도 처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음. 이번 인권결의안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 그러나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대목은 빠졌으며,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 대북인권결의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 이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 앞서 북한측은 이번 인권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음.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며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음.

-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5년에는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진 뒤 지난해에는 논란 속에 다시 기권을 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었음. 그러나 이번 인권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인권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풀이됨.

### ● 北, 쿠웨이트기금과 협조합의서 체결(11/19)

- 북한 도시경영성과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쿠웨이트기금: 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이 19일 협조합의서를 체결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도시경영성과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 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19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밝혔으나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조인식에서는 북측에서 리강희 도시경영성 부상이, 쿠웨이크 기금에서 방북 중인 헤삼 알 와카얀 사무차장이 각각 합의서에 서명했음.
- 북한은 작년 2월 평양시 상수도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쿠웨이트 기금 대표단이 참석해 상수도 개선공사에 이 기금의 지원이 있었음을 시사했음.
- 쿠웨이트기금은 1998년 북한의 요청에 따라 호주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인 SMEC(Snowy Mountains Engineering Consultancy)사를 통해 평양 상하수도 시설의 현대화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공사비 5천330만 달러 중 2천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합의서는 북측의 도시경영성과 쿠웨이트 기금측이 체결함에 따라 도시개발 및 상하수도 건설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對中 기술유출 韓·美 공식협의체 구성해야”(11/21)

- 한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미 의회 자문위의 의견이 제시됐음.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20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08년 연례 보고서에서 “많은 한국민들은 중국으로 자국기술이 유출돼 교역상 우위를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중국 기술유출이 미국의 안보



와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부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 위원회는 또 한국은 중국과 외교 및 경제적 유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을 동북아 지역에서 안정세력으로 보고 통일 후에도 미군 주둔을 계속해줄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북한은 한국 안보의 최대 우려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일어날 수 있는 무정부 사태를 포함한다고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진단했음.
- 한·중관계와 관련, 위원회는 “한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중국의 대북(對北) 영향력을 활용하려 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행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음. 이어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걱정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 및 북한 정권 붕괴시 양국이 떠안게 될 비용”이라면서 “중국은 북한 난민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위원회는 특히 북한정권 붕괴시 우려되는 대량 탈북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들보다 덜 강경한 대화로의 접근을 자주 공유했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국이 6자회담에서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가끔 미국의 유화적 태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음.

#### ● “韓, 통일후 미군주둔 강력 희망” <美의회보고서>(11/21)

- 한국은 중국과 외교 및 경제적 유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을 동북아 지역에서 안정세력으로 보고 통일 후에도 미군 주둔을 계속해줄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미 의회의 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제기됐음.
- 또 북한은 한국 안보의 최대 우려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일어날 수 있는 무정부 사태를 포함한다고 지적됐음.
-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08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외교적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맹방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을 이 지역의 안정세력으로 보고 미국이 한국 통일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음. 또 “이런 맥락에서 한국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에 미군 주둔을 계속해주길 바라는 강력한 희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음.
- 위원회는 “북한은 한국안보의 최대 우려”라면서 “이러한 우려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그리고 정권 붕괴에 따른 무정부 사태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음.
- 위원회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과 무역 확대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한국



인들은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돼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 한미 방위비협상 사실상 타결(11/21)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19~20일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방위비분담 제5차 한.미 고위급협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추가 회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외교경로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해 조율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해 쟁점사항들은 모두 합의됐음을 시사했음.
-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증액비율을 집중 협의한 결과, 우리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국내 물가상승률 수준(2.5%) 정도 증액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아울러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온 협정을 3~5년 단위로 체결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지난 4차례의 협의에서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를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음.
-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했음.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돼 연말까지는 새 협정에 사인해야 함. 지난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음.

### ● “APEC 한미일 정상회담 북한에 초점”<백악관>(11/20)

- 미 백악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이 페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날인 22일 3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의 초점은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음.
-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배경설명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및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면서 “3국 정상회담의 초점은 북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또 “부시 대통령이 한일 양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며 이들 회동은 아시아에서 미국 안보와 이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본이 되는 동북아에서의 강력한 동맹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북핵 6자회담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매우 건설적인 역할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韓美日, 페루 APEC서 정상회담 개최”(11/18)

- 오는 22일부터 페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간에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
-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지난 2006년 1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간에 회동한 이후 2년 6개월만임. 회담에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제반 현안에 대해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부시 대통령과 개별 회담도 가질 예정이어서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부시 대통령과의 마지막 미·일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 한·미 5차 방위비협상 19~20일 하와이 개최(11/17)

-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제8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한·미 고위급협회가 19~20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총액산정 및 우리가 부담해야할 분담금의 증액비율을 집중 협의할 예정. 한·미는 지난 4차례의 협의에서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를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 주둔비용 총액산정과 관련, 미국은 미국 현역과 군무원의 인건비(약 2조원)를 제외한 비인적주둔비용(NPSC, 약 3조원)을 기준으로 NPSC의 50%(약 1조5천억원)를 우리가 부담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는 NPSC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부담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음.
- 우리측 방위비 증액비율은 미국 측은 내년의 경우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한 반면 우리 측은 작년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



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 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돼 연말까지는 새 협정에 사인해야 함.

- 지난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음.

#### ● **李대통령, 美재계에 한미FTA 협력 당부(11/17)**

-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후(한국시각 17일 오전) 토머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소장을 접견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양국 에너지 기업간 경제협력 및 미측의 대(對)한국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음.
- 이 대통령과 도너휴 소장은 먼저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음. 이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유럽, 한국, 아시아 등 세계경제가 다 어렵다”면서 “아무튼 대선이 끝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만큼 미국이 변화하는 가운데 소비가 늘어날지 모르겠다”며 미국 경기전망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음. 이에 도너휴 소장은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잘해 왔지만 요즘 위기는 보기 드문 위기”라면서 “우리도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전략적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 의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미 재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음.
- 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과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양국간 협력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향후 양국 에너지 기업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상의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음.
- 이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완화, 선진 노사환경 구축,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 우리 정부의 친기업 환경 조성 노력을 소개하고 미국 기업의 대한투자 확대를 당부했음. 이에 대해 도너휴 소장은 미국 재계의 한미 FTA 비준 의지가 확고함을 거듭 강조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재계가 비준 노력을 적극 펼 것”이라며 “한미 FTA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결국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음.

#### 나. 한·중 관계

##### ● **한·중, 24일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11/18)**

- 한국과 중국은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음.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송봉헌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에서는 쉰리화(錢利華) 외사판공실 주임이 각각 대표로 참가함.





-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작전부대간 군사핫라인 개설과 이상희 국방 장관의 중국 방문, 상호군사훈련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과 중국은 작년 5월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과 량광례(梁光烈, 상장)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간 회담에서 양국 수교 15주년 기념 일인 그해 8월 24일을 전후로 두 나라 해군 간 및 공군 부대 간 군사 핫라인을 각각 개통하기로 합의했음.
- 양국은 당시 오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국 베이징(北京) 수도방공센터, 진해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과 칭다오(靑島)의 중국군 북해함대사령부 작전처에 상용 국제전화 방식의 핫라인을 각각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그러나 중국 측은 이후 대구의 제2 MCRC와 산둥반도의 지난(濟南) 군구 방공센터, 해군 2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과 칭다오의 중국군 북해함대사령부 작전처 간에 설치하자고 수정 제의한 뒤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
- 국방부 관계자는 “핫라인 개설을 위한 합의서의 최종 문안을 조율 중이지만 개통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중국 측은 작전부대간 최초의 핫라인을 개설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개설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앞서 20일에는 모스크바에서 한·러 국방정책실무회의가 개최됨. 송봉현 국제협력관과 블라디미르 이바노비치 니키신 러시아 국방부 국제협력총국 조약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군 인사교류와 부대 방문 등의 문제가 논의됨.

#### 다. 미·중 관계

##### ● 美FDA, 19일 中에 첫 해외사무소 개설(11/18)

-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번 주 안으로 중국산 식·의약품 검사를 위한 중국 현지 사무소 3곳을 개설할 예정.
- FDA가 해외에 사무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 미국 보건부와 FDA에 따르면 중국 현지 사무소들은 오는 19일 베이징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광저우와 상하이에 각각 개설될 예정.
- 중국 사무소에는 직원 13명이 파견될 예정이나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음. 마이클 리빗 미 보건장관은 지난 주 성명을 발표해 “중국 내 FDA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국의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음. 리빗 장관은 중국에 이어 인도와 중앙아메리카에도 FDA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라. 기타

### ● 한국, 평화지수 5단계 상승한 37위(11/18)

- 우리나라의 2007년 평화수준이 전년보다 5단계 상승한 3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평화포럼이 18일 발표. 세계평화포럼은 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등 3개 분야의 각종 지표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지수를 산출하며 우리나라의 평화지수는 76.0으로 전체 조사대상인 76개국 중에서 37위에 해당됐음.
- 전 세계 평화지수는 73.6으로 전년(73.4)과 비슷한 가운데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90.4)이며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유럽과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10위권을 형성했음. 파키스탄(44.9)이 최하위였고 미국(47위), 중국(65위) 등도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았다. 북한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통계에서 제외됐음.
- 세계평화포럼은 연구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0년 말 당시 문화일보 사장이던 김진현 전 과기부장관이 주축이 돼 설립된 단체로, 매년 세계평화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 ●李대통령 “한-페루 FTA 협상 개시 선언”(11/18)

-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한국시간 18일) “오는 21일 있을 한-페루 정상회담 때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이 대통령은 이날 페루 국빈 방문에 앞서 페루 일간지 ‘엘 꼬레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이 대통령은 “양국간 교역이 최근 3년 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다”면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양국간 통상 및 투자교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이 대통령은 “페루 시장에 중국산 제품이 넘쳐나는 상황이 우리가 페루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라면서 “한국제품이 중국 또는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FTA가 체결되면 한국제품의 가격경쟁이 이뤄지면서 페루 소비자들의 후생복리가 증대되고 페루 상품의 대(對)한국 수출도 늘어나 페루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페루 개발 지원을 위한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방위산업, IT(정보기술), 해양과학 기술 등 양국간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李대통령, 한-브라질 융합경제협력체제 구축 제안(11/18)**

- G20 금융정상회의를 마치고 브라질을 공식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 한국과 브라질간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 “광물자원과 플랜트 산업, 석유개발과 조선산업, 바이오연료와 자동차. 녹색산업의 3대 융합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브라질 경제인 오찬간담회에서 “한국과 브라질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높아 시너지 창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음. 이는 브라질의 철광석,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의 전력,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의 플랜트 산업 경쟁력을 연계한 패키지형 협력사업 확대, 브라질의 심해유전과 우리의 첨단 조선산업, 브라질의 세계적인 바이오연료 기술과 우리의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묶어서 협력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 이 대통령은 “이번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인 융합협력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고 한-브라질 산업협력 기금과 한-브라질 산업협력센터 설립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뒤 브라질 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당부했음.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